

사도 대선운동의 목표와 역사적 의의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중앙연수원

1. '반보수, 반재벌 민주진보대혁명'의 과제 앞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재벌이 한국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지배를 뒷받침하는 보수정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이 땅의 팔홀러 일하는 다수국민인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생존권조차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군부정권이 아니라 이른바 '문민정부' 하에서도 경제개혁, 정치개혁이 실효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작년도 신노사관계구상 선언 이래 8개월에 걸친 지리한 논의과정과 연말의 날치기 개

악을 보면서 정권의 친재벌적-반민중적 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권이 출범 초기에 행한 개혁은 노동자-민중의 힘에 의거하고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참답게 대변하는 '진보적 개혁'이 아니라 지배질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수적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수구보수세력의 반발에 부딪치자 그러한 보수적 개혁마저 곧장 내팽거쳐 버렸습니다. 게다가 현 정권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이데올로기를



외치면서부터는 노동에 대한 착취를 이른바 '유연적 방식'으로써 강화하려는 신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노동자대중에게 피부하면서 우리 사회를 자본의 논리만이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하는 사회로 만드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총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현 정권의 공세에 대해 노동자들은 총파업투쟁으로 맞섰으며, 노동자 총파업투쟁은 전국민적인 항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수야당 역시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96, 97년 총파업투쟁과 한보사태, 현철사건 등을 거치면서 현 정권은 지배층으로부터도 신임을 잃었으며, 국정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정치권 세력들은 서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가운데 권력을 잡기 위한 이권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이들 간의 대립구도는 이제 신한국당-이회창(조순), 국민회의-김대중(김종필), 국민선당-이인제의 3파전 구도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의 정강정책은, 비록 서로 간에 사소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우리 사회를 신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려는 동일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벌들의 발

언권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금융실명제의 사실상의 폐기를 요구하자, 모든 보수정치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요구에 화답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수정치에 의해 한국정치가 저당잡히고 있는 한, 한국이 재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재벌공화국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재벌의 발언권이 더욱 증대하면, 한국의 정치체제는 제도권 정치세력들이 이런 저런 재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정파들 간의 권력분점체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시기의 국내 정세는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도권 정치세력은 보수화경쟁에 여념이 없고,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및 제도권 정치 전반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추가폭락, 환율폭등 등으로 한국경제는 급기야 파산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IMF 신탁통치체제 하에서 한국경제의 대외적 종속성은 심화되고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은 완료될 것입니다. 경제파산의 부담은 노동자-민중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이 대거 진행되어 몇몇 재벌들에게로 부는 더욱 집중될 것이다. 모든 보수세력들은 이 과정을 한국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난국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에게 우리 사회의 미

래를 내밀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민중이 나라를 이끄는 진정한 주체로 나설 때에만,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다운 해결책 역시 강구될 수 있습니다.

□총체적 파탄상태에 빠진 우리 사회를 구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나서야 하며, 재벌지배 경제체제를 노동자-민중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늘날 '반보수, 반재벌 민주진보대혁명'의 과제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민중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노동자-민중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노동자-민중운동의 주·객관적 조건

□우리는 작년말 노동법, 안기부법 국회 날치기 통과 이후 진행된 총파업과 가두시위를 통해 제도정치권의 정치를 압도하는 노동자-민중의 위대한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쟁과정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구호는 대중적 구호가 되었으며, 적어도 당위로서의 정치세력화를 부정하는 노동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파업투쟁과 연대투쟁은 김영삼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긴 했지만, 여·야합의에 의해 노동법이 재개

악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힘은 크게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는 노동자 총파업에 참여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회의에서부터, 정권교체의 호기인데 이를 해방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에서 기존 정치세력 가운데 그래도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분위기가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진영과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된 세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두정치'에서 표현되었던 노동자-민중의 위력적인 힘이 대선국면에서는 아직 힘차게 솟아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민중세력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입을 막는 허다한 법적·정치적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대통령 직선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선거)는 도입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노동자-민중진영의 선진부분들을 끊임없이 도려내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선거법 등은 기존정당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민중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약들이 존재하고 금권정치와 보수언론에 의한 여론조작이 판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부르주아명망가들만이 세 세상을 만만양 설치게 하고, 지연, 혈연, 학연과 같은 온갖 연줄을 내세워 노동자-민중을 탈계급적 개인으로 해체시키는 부르주아정치를 판치게 하는 기제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인민 주권의 원칙'이 천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수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인민주권의 원칙은 사실상 반대물, 즉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로 전환되고,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전체 사회의 이해에 반하는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로, 소수 지배자들의 이해가 거꾸로 전체사회의 '보편적' 이해로 뒤집어지며, 노동자-민중은 정치적으로 무력화되는 가운데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으로 재생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의 공세와 차별지배체제에 대한 분노와 보수정치에 대한 환멸은 오늘날 모든 노동자-민중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차별지배와 보수정치를 타파하려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힘들을 집결하고 그 힘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

는 모든 질곡을 벗겨내고 역사를 만드는 진정한 주체로 우뚝설 날은 멀지않아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현시기는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민중투쟁이 다시 소생하고 활기있게 진출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96년 독일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96년 11월 노동법 개악에 항의한 스웨덴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최근 벨기에 르노공장 이전을 둘러싼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과 미국의 UPS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노동자들 역시 몇 십년에 걸친 오랜 침묵을 깨고 자본의 반동적 공세에 대항하여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3.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위하여

□민주진보진영이 중심이 되어 건설한 97년 대선 공동선거대책기구인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이하 '국민승리')는 단지 이번 득표만을 위해 조직된 기구가 아닙니다. 국민승리21 운동의 목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합니다.

(1) 이 땅의 맘풀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의 힘을 모아 '반보수, 반차별 민주진보대혁명'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한다.

(2) 이를 위해 보수정치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정치를 활성화하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국민승리21 운동은 노동자-민중의 회생

사였던 이전의 역사를 청산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진보정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런 저런 보수진영 후보들은 '정권교체', '세대교체', '3김청산'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친재벌적, 민중배제적, 반노동자적 보수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권교체', '세대교체', '3김청산'이란 그들 간의 권력투쟁의 명분들에 불과하며 '반보수, 반재벌 민주진보대혁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승리21 운동은 우리 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보수정치 그 자체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노동자 및 일하는 사람 모두의 생존권 보장을 제1의 선거공약으로 삼고 있는 국민승리21의 10대 핵심공약 등은 '반보수, 반재벌 민주진보대혁명'을 추구하는 국민승리21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0대공약은 보수진영 전체와 싸우는 민주진보진영의 강력한 정책적 무기입니다.

□국민승리21의 후보는 보수진영에 대항하는 '민주진보진영'의 후보입니다. 또한 '민주진보진영 후보'인 국민승리21의 후보를 규약에서는 '노동자, 민중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로, 그리고 창립 이전에 국민승리21(준)과 정치연대 및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교수모임의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에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의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후보'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승리21 후보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후보', '노동자-민중후보'이며, 노동자-민중의 대의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민주진보진영 후보'입니다.

□우리는 단지 득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득표운동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새로운 정치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현장의 요구를 정치적 이슈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쟁의 주체, 정치의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본의 신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항하는 노동자투쟁과 결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대중이 국민승리21 운동의 중심적 주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거운동이 노동자계급과 비슷한 조건에 놓여져 있는 농민, 빈민, 도시서민과의 민중적 연대 및 노동자-민중운동에 동참하는 학생, 지식인 등과의 진사회적 연대의 실현과 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을 우리

운동의 출발지점을 삼으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점을 실현시키기 위해 운동해 나가야 합니다. 득표를 위한 전술적 대응 역시 중요하지만, 장기적 전망을 지니고 대응하려고 한다면, 득표전술은 목표 실현을 위한 작은 한 계기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득표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노동자-민중정치에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발전시키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처해있는 구체적 현실에 나타나는 모순들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해내고, 이러한 구체적인 이슈들을 장기적인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의 전략적 과제와의 관련 속에 배치시켜 내며, 현장의 동력을 끌어내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해내는 것이 우리의 실천의 구체적인 실천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실천은 기존의 노동자정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점을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즉, 서구의 시민주의, 현존사회주의 전략에서 실패한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의 시민주의 전략에서는 노조는 경제투쟁, 정치는 노동자정당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분리한 후 의회를 통한 정치세력 강화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주의 정당은 결국은 최대득표를 목표로 하는 선거정당으로 바뀌었고, 노동자는 선거를 위한 동원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본이 제창하는 민족주의의

깃발 아래 국제경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동원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존사회주의 전략에서는 전위당인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주체가 되었고 노동조합은 연동장치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노동자는 절대화된 당의 지도를 따르는 객체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노먼 클라투라라는 새로운 특권계급이 등장하여 노동자-민중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피티당에서는 대중적 노동운동과 변혁적 정치운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시도는 아직 단초적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그 한계를 현실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한 지지층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투쟁의 주체,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로 되게 하는 것이 이번 대선 투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러한 투쟁의 주체,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들에 의해 새롭게 개척되어 나갈 것입니다. ♦

"나에게 던지는 현표는 노동자, 봉급생활자, 도시 서민, 농민들에게 희망의 장미꽃으로 돌아올 것이나, 보수 세 후보에게 던지는 현 표는 우리 가족을 길거리로 내모는 결망의 칼날로 돌아 올 것이다." (권영길)